



최근 수혈로 인해 에이즈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에이즈 등 법정전염병의 병력자 명부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여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감염인 및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은 병력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과연 그들이 우려하는 바는 무엇인가?

“병력자 혈액은 검사에서 걸러져 정보 제공은 불필요”

글 | 이인규 · 한국감염인협회 대표

차별과 편견은 인류가 생존하고 번성하며 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했던 먼 옛날부터 시작되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진 다수의 민족 및 집단이 생겨나면서 인종 간, 국가 간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이 자행되고 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특정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나 특이한 사고를 가진 집단에 게까지 무분별하게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법정전염병이라는 질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 질병 하나만으로도 개인의 삶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어느 누군가의 도움과 이해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수혈로 인한 에이즈감염이 문제가 되었다.

에이즈감염인 등 법정 전염병력을 가진 자들의 신상정보를 대국민 보호라는 정책에 의하여 정부는 적십자 측에 주간

단위로 병력자의 명단을 제공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에이즈 및 그 외 법정전염병을 갖고 살아온 감염인들은 병력자 신상정보제공이라는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다.

병력자 신상정보제공은 감염사실의 노출 위험 더욱 높아

만약 이러한 정보가 대한적십자라는 민간단체에 제공되었을 경우 감염인들은 또다시 차별과 편견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례들이 감염인들의 차별을 증명해 주고 있다. 직장에서의 강제 사직권유와 가정에서는 가정의 파멸과 봉괴 등으로 많은 감염인들이 부당한 처우로 차별을 받아왔으며 눈에 보이지 않게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에도 목과 할 수 밖에 없다. 차별과 편견에서 비롯되어 가족에게까지 버림

받는 일련의 사례들은 이러한 질병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건복지부의 병력자 신상정보 공개는 더욱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현혈과 수혈의 문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현혈하는 사람의 수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은 더욱더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기양상자로 명명된 감염인들의 명단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검사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수혈사고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 미형성기의 정부 미등록자들을 걸러내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염인들을 더욱 크나큰 소외의 나락으로 빠뜨리려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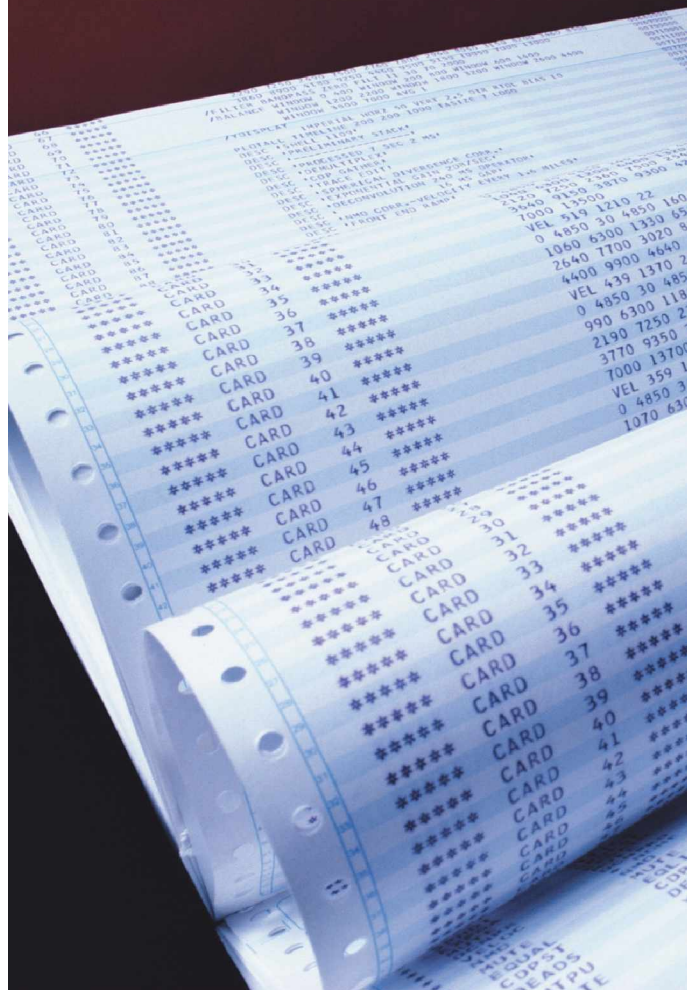
이것은 분명한 인권침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서울이나 광역도시 같은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소도시나 읍 단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불을 보듯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현혈의 집의 봉사자가 옆집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친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그 비밀을 지켜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또 다시 순수한 병력자들을 매장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병력자들의 현혈금지로 문제 풀어야

당연히 기병력자들은 현혈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에서는 기병력자들에게 현혈의 금지를 촉구하는 안내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다.

과연 적십자사에 병력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검사기관의 검사체계의 단축과 비용의 축소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현혈자와 수혈자의 건강보호에도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쓸모없는 인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등의 좋은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병력자들을 걸러내어도 수혈사고가 생긴다면



그때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무엇 때문이었다고 설명을 할 것인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감염인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정부시책은 또다시 감염인들을 음지로 숨여 들게 하고 사회와의 고립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심사숙고하여 이러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개인의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재 병력자로 등재되어있는 감염인들의 마음은 그다지 편치 않음을 정부는 인지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에 관하여서도 되물고 싶다.

다시 또 사회의 소리 없는 폭력에 희생당하는 감염인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마음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